

존경하는 문체부장관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연극등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많은 곳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30여년간 음악 시장에 종사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티스트, 매니저, 제작자, 사운드디자이너, 게임음악 제작, 광고음악제작, 작곡가, 엔지니어, 프로듀서, 공연기획자로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끝없이 노력하면서 결정적으로 지원 보다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이 업계는 정부지원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 라는 말이 업계에 공공연 합니다. 저 또한 그말이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몇십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서류 작업에 능한 업체와 학연, 인맥이 넓은 회사와 개인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국적 특색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 주실 부분은 가수나 연주자 뿐이 아니고 제작자와 레이블도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혼자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틀즈와 같은 밴드가 성장 할때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 본 레이블과 프로듀서등의 예를 구지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음악 역사를 들여다 보시면 과연 어떻게 시장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도구의 시설, 창작소등은 기존 생태계를 무차별 파괴합니다. 마치 완장을 찬 친일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뱅의 멤버 하나가 콘서트를 연다고 정부지원 시설에서 연습하고 메이저 가수가 정부 지원 산하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믹스해서 앨범을 낸다면 기존 일반 사업자의 연습실이나 녹음실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벤처기업의 태생처럼 음악 관계자들도 열악하지만 작은 창고나 지하실에서 시작하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어떠한 제작자나 아티스트들도 대기업과 손잡고 도움을 얻고 싶고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편하고 넉넉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금들이 흘러갈때 시장은 큰 부작용으로 기존 시장에 균열과 올바른 경쟁을 부셔버립니다.

음악시장도 시장입니다. 자생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 보고 힘 센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막아 주시는게 정부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을 군소 시장의 점포라고 생각하시고 정부지원 시설들은 대기업 산하의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 같은 곳에서 마치 자선 사업 하듯 음악 서비스와 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듯 변형된 서비스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 업로더들에게 포상하는 듯 한 사업 모델은 포털 입장에서선 자선행위와 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아량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포털에 광고비는 주고 전면에 아무 홍보도 못하는 작은 제작 회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모쪼록 많은 정책 결정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즘 수도 없이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작은 레이블 콘서트 또는 행사에서 시작해서 성장합니다.

해외에서 대형 페스티벌이 많이 생기고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음악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몇몇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지방관청의 도움을 얻어 자리 잡은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좋은 장소를 제공 받고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수익률과 생계에는 큰 상관없기에 쉽게 지역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의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문어발로 서울은 물론 다른 지방으로 행사 대행까지 맡아 하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홍대에는 홍대문화가 있고 전국 각 구에는 지역색이 있습니다.

만약 강남구의 레이블에서 홍대 페스티벌을 문광부 지원받아 한다면 아마도 홍대의 레이블 및 자치구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입니다.

구 단위도 이런데 다른 도 지원을 받는 기획사가 서울의 무한 경쟁 상황에 정부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자면 지역군에서 움직이는 페스티벌 운영조직이 그 지역 밖으로 행사 수주를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이제 정치인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젊은 기획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요즘은 콘서트 시장이 사양화 되고 페스티벌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페스티벌은 소형부터 대기업, 음료회사등이 진행하는 대형 페스티벌까지 요즘은 셀 수 없이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수명이 다한 페스티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업의 성장 쇠퇴와 같습니다.

예로 재즈라는 장르는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종주국인 미국 음악시장에서도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사장 되어 가고 BGM화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르별 음악 페스티벌도 역시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재즈란 이름으로 시작한 정부지원이 없는 페스티벌은 벌써 50% 이상 EDM이나 가요와 인디음악으로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고 그래야 대중들이 호응합니다. 자연 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스티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도 현재는 락 시장이 80%이상 줄어 들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반영하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지원을 받는 기획사는 자신의 지역을 넘어 평창 올림픽 준비를 위한 페스티벌에서 까지 성의 없는 재즈 아티스트로 채워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정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관에게는 매우 편하고 일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살려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즈는 대중화가 이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장르로 시장 고용 측면에서도 각자의 밤무대와 행사 페이지가 시장의 전부입니다. 재즈란 장르는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뮤지션 개인만 겨우 하루 수당으로 연명하는 폐쇄적 장르입니다. 한국 상황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재즈 시장이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은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에 혜택을 받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부지원금으로 리스크를 피할수 있고 지원금으로 급여를 주고 이익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회사나 개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번째 부탁입니다.

십수년전 문화컨텐츠 진흥원이 처음 목동에 있던 시절 지금은 실패해서 철거한 부영 녹음실을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녹음실, 각종 정부 지원단체의 녹음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실패했었고 실패하리라 예상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없는 녹음 비지니스는 가수나 작곡자가 아닌 다른 산업 영역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꿈과 업으로 개인에게는 정말 큰 돈을 창업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 시설에 녹음실을 짓는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관에게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몇억부터 몇십억대의 시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민간 녹음실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녹음 비지니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반 뮤직 비지니스입니다. 인디뮤지션과 어려운 뮤지션, 영화 애니메이션 심지어 연구를 돕는 다는 명목하게 녹음실을 지어서 그들에게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면 녹음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최대 영화 후반 작업 유명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시설하기 보다 정부 지원시설을 렌트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거대 회사가 자신의 설비 운영 투자 보다는 정부지원시설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젊은 인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경쟁하겠습니까?

특히 도제방식으로 전수되는 지식들을 어떤 사운드 엔지니어가 힘들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밤낮으로 연구하며 일할까요?

저와 제 자식이라도 관의 관계 기관에서 편하게 일할겁니다. 현재 이렇게 난립된 관의 녹음실에서 수많은 대중 가요 관계자에게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다고 정부에서 동네 마트도 지어서 직영 하실런지요? 그러면 동네의 작은 점포들은 대부분 부도 나겠지요. 이 업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1987년도 기준 성음폴리그램 혹은 서울 녹음실이 3시간30분에 비용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현재 3시간 30분에 20만원정도 입니다. .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녹음실이란것은 정부 입장에서선 시설해 놓으면 가격대비 전시행정에 보기도 좋고 프레젠테이션 할때 생색 내기 쉬운 일인것 압니다.

바꾸어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영역인 독립영화와 어려운 젊은 영화인이 힘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등을 렌탈해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정부에서 카메라 조명을 구입해서 렌탈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장비렌탈과 녹음실 렌탈 사업은 매우 비슷한 비지니스이며 큰 차이는 영상 장비 렌탈은 그냥 장사이고 녹음실업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운드엔지니어의 예술적 기술적 감각으로 음악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소원은 민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음악 비지니스 모델에서 정부가 빠져 주는 것입니다. 꼭 녹음실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음악계를 위해 운영 해오는 적자에 허덕이는 녹음실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세대 전략에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퀄리티 강화를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제작자등 음악을 제작하고 소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게 앞으로의 문화 산업의 기틀을 이룩하는 국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 정부지원 시설 폐쇄 및 시장의 민간 시설 이용 유도

- 지원대상의 바우처 지급으로 시설 이용 혜택 업계와 업체 그리고 정부 지원의 WIN-WIN

국내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도 사비로 자신이 좋아 하는 음악과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작은 제작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려면 이들을 배려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녹음 촬영등의 정부 산하 기관을 만들기 보다 기존 업체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이용자와 사업체 모두 배려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존 정부 산하 창작소, 연구소, 시설등에 산재된 민간 사업과 중복된 시설들을 정리해주셔도 다시 음악 산업 근간의 생태계가 다시 정상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넘고 장황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 진